

후 “위안부 합의 국가 간 약속, 뒤집기 바람직 않아… 새 공동선언 기대”

방일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및 강제징용 해법은 국가 간 약속이라며,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 단독 인터뷰에서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대립적이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국민으로서 전 정권과 합의는 매우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국가로서 약속이기 때문에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위안부 문제 합의 및 강제징용 해법에 반대해 왔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고려하는 동시에 국민과 피해자, 유가족 입장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며 “더욱 인간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국민의 감정에 대한 배려도 요청했다.

일본과 관계에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 한국도 일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발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예정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와 정상회담에선 “어떤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3~24일 방일 앞두고 요미우리 단독 인터뷰

“국민으로선 수용 어렵지만…정책 일관성 필요”

“日 매우 중요한 존재…협력 분야 확대해야”

교도 “한일 정상, 차관급 협의 추진 합의할 듯”

신뢰를 쌓기 위한 ‘서틀 외교’ 유용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 三)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언을 계승하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 (공동선언) 작성에 의욕을 나타냈다”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지난 6월 한일 간 임시적으로 실시됐던 한일 전용 입국심사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면 재설치가 가능하다”며 협의에 긍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일본 에도 막부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川家康)에 대한 서적을 최근 읽었다면서 일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대를 존중하고 공동체에 공헌하려는 일본 문화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많다”며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서로 이해한다면 유용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한일 관계 심화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평

화적으로 공존해 위협이 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북미 간 대화도 중요하다고면서 “어느 나라가 먼저가 될지 알 수 없으나 북한과의 협력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 개발과 관련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전역 비핵화”라며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1단계에서 핵과 미사일을 동결, 2단계에서는 축소, 3단계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가족의 원통함에 깊이 공감한다”며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일 후 방미하는 이 대통령은 “한국에 있어서 중국,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은 강한 토대가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제든 안보든 기본적인 축이 되는 것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일부 일본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 회복이 먼저다”면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별개의 문제”라고 지

적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이후 국내 언론을 포함해 대면 단독 인터뷰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3~24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 이어 25일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양국 공통 과제 극복을 위한 차관급 협의 추진에 합의한다고 보도했다.

한일 차관급 협의에서는 저출생 대책, 지방 활성화 등 양국이 떠안고 있는 과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요미우리는 이 대통령이 대외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며 “(일본) 여야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역사문제가 다시 문제가 될까 신경을 쓰며 (한국의) 신 정권과 협력을 착실하게 쌓아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慶応)대 동아시아국제정치학 교수는 이 대통령의 요미우리 인터뷰에 대해 “한일 관계에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 측은 이재명 정권도 내정적인 위협을 안고 대외 외교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문은 이날 “이 대통령 불굴 역전의 인생…빈곤·암살 미수를 넘어” 제하 별도의 기사로 이 대통령의 삶을 조명하기도 했다. 경제 관계 등 한일에 대한 해설 기사를 함께 지면에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초대, 주한외교단 민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與, 호남특위 출범… 정청래 “민주주의 뿌리 호남에 보답할 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후보 시절 공약했던 호남발전특별위원회(호남특위)가 21일 출범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호남특위 출범식을 열었다. 위원장은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인 3선의 서삼석 의원이 맡았다. 수석부위원장은 이병준 전 의원, 김성 장흥군수, 이원택(군산·김제·부안) 의원 등이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은 주철현(여수·갑) 의원이다. 정 대표는 “이순신 장군의 전승은 이순신 장군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호남 백성들의 애국심에서 나온 승리였다”며 “한국 현대사 과정 속에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뿌리와 정신은 역시 호남이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싹틔던 동학운동도 호남에서 출발했다”며 “3·1운동, 4·19혁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뿌리와 정신은 호남”

“그동안 소외되고 피해… 자부심 걸맞은 경제발전으로 보답”

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도 호남에서 발현된 동학운동, 민심이 천심이란 민주주의 정신에 뿌리를 뒀다”고 했다.

그는 “다들 대한민국 민주화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지대하다고 하는데 국가는 호남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에 대해 답을 할 때가 됐다”며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정신을 온몸으로 받아 안은 민주당에서 이제 호남에 답할 때가 됐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289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그중에 92%를 호남에서 이겼던 것은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라며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

생에 특별한 보상 따라야 된다”는 국정철학에도 맞는 일”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후세에 민주당이 발족시킨 호남특위가 호남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걸 역사적 사실로 기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성의를 갖고 표시하게 성과를 내야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대선 때 광주·전남 골목골목선대위원장 하면서 호남인들이 느끼는 자부심 이면에는 그동안 소외되고 피해를 봤던 생각들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제는 호남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에 걸맞게 호남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 민주당이, 이

재명 정부가 보답할 때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서삼석 위원장은 “호남특위는 이 땅의 민주주의 민주정부 수립에 헌신해 온 호남에 대한 정청래 당대표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고 시작”이라며 “특위는 앞으로 그 뜻에 기반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어 “특위는 앞으로 호남을 넘어 새 정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일하는 대표의 의지를 읽은 이상 호남과 국민이, 우리 당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강기정·김영록 광주·전남특별자치체 논의… “초광역 협력”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공식 출범을 앞두고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만나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전남 오후 강 시장과 김 전남지사가 광주시청 인근 식당에서 만나 2시간 가량 오는 27일 출범하는 광주·전남 특별자치단체 방향 등에 사전 조율했다고 21일 밝혔다.

강 시장과 김 전남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방안 등을 공유하면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시·도가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또 앞선 사례인 충청권광역연합 모델을 토대로 협의체가 출범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5국 3특’ 정책에 대비해 시도가 협력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 발굴, 시·도광역의회 구성 방향 등을 적극 지원 하

겠다는 의사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5국 3특’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 권역별 특화된 성장 동력을 키워 지역 발전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이날 논의에서는 광주·전남 특별자치체의 수장을 선출하는 방식도 논의했으며 시·도지사가 임기를 정해 교대로 맡을 것에 대해 일정정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강 시장과 김 전남지사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초광역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교환했다”며 “특별자치체가 구성되면 방향과 공동 사무 등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